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창원)2015누12154]



【전문】

【원고, 항소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피고, 피항소인】 창원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외 2인)

【피고 3 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구합21637 판결

【변론종결】2016. 4. 6.

【주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 창원시장이 2012. 12. 10.에 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12. 12. 28.에 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12. 12. 7.에 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고양시장이 2012. 12. 14.에 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4.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 지점 등기 내역은 순차로 아래 표 1, 2와 같다(이하에서 표 2. 기재 각 지점을 순번에 따라 “창원지점, 인천지점, 부산지점, 고양지점”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점”이라고 한다).

[표 1]기간본점 소재지2001. 7. 4. ~ 2003. 3. 24.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2003. 3. 25. ~ 2012. 6. 4.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2012. 6. 5. ~ 현재서울 중구 퇴계로 100, 11층 1101호

[표 2]순번설치일자지점 소재지이전일자지점 소재지12002.1.2.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56(봉암동) 22003.7.25.인천 남동구 간석동 556-22012.11.15.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상가 비동 101호(송도동, 센트럴파크1차)32003.8.4.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322, 3층2005.3.31.부산 진구 전포2동63242002.1.2.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302003.3.18.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52 현대에프레보 빌딩 101, 102호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 광역시장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 창원시장(창원지점),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지점), 피고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부산지점), 피고 고양시장(고양지점)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취득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단,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관청은 피고들인 경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따라서 원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조 등에 따라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강남구청장이 정당한 과세권자이다"라는 이유로 74,574,179,02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경 피고들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피고들의 위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26.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그 보관, 관리, 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41호로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7.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0080호) 계속 중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4.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 지점 등기 내역은 순차로 아래 표 1, 2와 같다(이하에서 표 2. 기재 각 지점을 순번에 따라 "창원지점, 인천지점, 부산지점, 고양지점"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점"이라고 한다).

[표 1]기간본점 소재지2001. 7. 4. ~ 2003. 3. 24.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2003. 3. 25. ~ 2012. 6. 4.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2012. 6. 5. ~ 현재서울 중구 퇴계로 100, 11층 1101호

[표 2]순번설치일자지점 소재지이전일자지점 소재지12002.1.2.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56(봉암동) 22003.7.25.인천 남동구 간석동 556-22012.11.15.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상가 비동 101호(송도동, 센트럴파크1차)32003.8.4.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322, 3층2005.3.31.부산 진구 전포2동63242002.1.2.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302003.3.18.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52 현대에프레보 빌딩 101, 102호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 광역시장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 창원시장(창원지점),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인천지점), 피고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부산지점), 피고 고양시장(고양지점)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취득세

(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단,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관청은 피고들인 경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따라서 원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조 등에 따라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강남구청장이 정당한 과세권자이다"라는 이유로 74,574,179,02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경 피고들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피고들의 위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26.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그 보관, 관리, 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41호로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7.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0080호) 계속 중이다.